탄 원 서

우방국 비상계엄 설명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담당 재판부 제출 전 확인)
사건번호 사건번호: _____ (제출 전 조회)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하여, 실제 지시 내용과 행정·외교업무의 법적 범위를 세심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등의 관계자를 통하여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2026년 8월 12일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의 내용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적 긴급 상황과 국내의 정치·안보 사정을 외국 정부에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그 성격상 외교적 소통 또는 정책 홍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에게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죄의 요건이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시 외교·안보 조직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문안 작성의 주체, 검토·승인 절차,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방식, 해당 메시지의 발신 여부 및 실제 도달 경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무엇이 단순한 외교적 설명이었고 무엇이 위법한 지시였는지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구분해 주십시오.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 등이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외국 정부에 국가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위가 직무에 포함되는지, 특정 메시지가 통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엄 관련 다른 사건에서의 유죄·무죄 판단과 이번 개별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피고인의 개별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외교·안보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당시 작성된 전자문서, 지시·보고 기록, 발송·수신 내역 등과 함께 대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누가 그 내용을 결정했는지, 법률상 업무 범위를 일탈했는지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살펴 주신다면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각 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무죄의 원칙을 적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부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행위의 결과, 책임 분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담당 재판부 제출 전 확인)